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3 | 2021. 05. 04.

이대남·이대녀와 재향군인회
박순제

최근 동남중국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장광열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사이의 한국 안보
홍성표

이대남·이대녀와 재향군인회

박 순 제

(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이대남과 이대녀는 재향군인회의 미래 보배

요즈음 가장 핫한 세대가 이대남과 이대녀, 즉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다. 2021년 4월 7일에 있었던 재보선에서 이들의 투표 결과가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했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자기입장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대남과 이대녀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교육현장에서 오늘도 직접 목격하고 있다.

#1. 저는 그저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적인 영위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라는 가장 큰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지원하게 됐고, 입학하게 된 것이 저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 1학년 박** 학생)

#2. 우리 과에는 호우회(護友會)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매년 현충일 등 안보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을 위해 대전 현충원을 방문합니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서해수호의 날에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 신입생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가보겠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추첨을 통해 일부만 가게 됐습니다. 우리 후배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먼저 크게 놀랐습니다.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직접 참배한 신입생이 “눈물이 절로 나왔고, 가슴 어디선가 큰 울림이 들렸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느꼈다고 말해서 두 번 놀랐습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해군 UDT 지원을 확고하게 굳혔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 호우회장 2학년 김** 학생)

대덕대학교는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에 위치하고 있다. 대덕대학교 군사학부 중 해군과 연관된 유일한 학과가 국방해양부사관과이다. 교육현장에서 본 이들은 군인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철철 넘친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군인의 기본 개념과 군대윤리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군인은 적과 싸워 이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할 수 있다는 것 <필승의 군인>이 첫 번째다.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군 간부가 되어야만 건강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윤리가 충만한 군인>이 두 번째다. 이러한 군인이 되기 위해 대덕대 국방해양부사관과의 이대남과 이대녀는 자치제도를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대남과 이대녀는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될 귀중한 보배들이다.

이대남과 이대녀가 함께 사는 재향군인회

향군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필한 모든 남·녀 예비역 장병이 모여 1952년 2월 1일 창립한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다. 그리고 보니 창립된 지 69년이 되는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단체이다.

여기서 필자는 교육현장과 향군의 사업,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인 이대남과 이대녀의 특성을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향군의 특성과 부합되는 공통분모를 서로 갖고 있어 일하기가 쉬울 듯하다.

첫째는 향군의 사업 중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분야이며, 둘째는 향군의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점이고, 셋째는 향군에도 <여성>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즉, 향군의 활동, 교육현장, 이대남과 이대녀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삼각형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상호간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이것을 정책화해 보자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향군지회와 대덕대학교는 각각 같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활동 분야에서 비슷한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충남 향군지회는 대전과 충청남도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대전지역만 국한 한다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의 지회가 있다. 이들 각각의 지회는 서해수호의 날에 애국의 현수막 설치와 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웅 추모, 6.25전쟁 당시 대전지구 전투에서 숨겨간 818명의 호국영령 추모제 거행, 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 등에서 투기된 쓰레기 수거 활동, 심지어 향군 직원과 여성회원들이 코로나 방역 활동과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임대료 경감 기회 제공 등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알게 모르게 다채롭게 실천하고 있다.

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의 이대남과 이대녀도 호우회(護友會)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호국함양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연계한 호국사업 활동, 평택 2함대 천안함 실체 보기, 현충원 방문을 통한 호국의식 거행, 대전 인근 지역의 전사적지 방문 등이다. 특히 호우회 회원들의 성실한 활동이 높이 평가돼 국가보훈처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의 이대남과 이대녀는 현재 대전지역 향군 지회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향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와 <참가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군은 이러한 사업을 지역별로 군사학과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전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군이 위치해 있는 각 지역의 지회와 그 지역에 위치한 군사학과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해수호의 날 등 계기별로 활성화시키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핫이슈인 이대남과 이대녀를 포용하는 향군 정책이 추진되면 향군의 위상 범위가 젊은이들에게까지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들은 미래 향군의 천군만마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제언으로, 향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군여성회가 이대녀를 충분히 수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향군의 여성회는 그동안 사회 봉사 활동에서부터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 활동 등을 왕성하게 실천해 해당 지역사회 내 대표적 여성단체로 성장했다.

대전지역 내 각 구회의 여성 회원 역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 어려운 이웃에게 떡국 떡 400kg과 100개의 선물 전달, 코로나 방역활동을 통한 확산 방지 앞장서기 등 대전지역의 소금이 되고 있다. 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 이대녀도 호우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호국의식 함양은 물론 봉사활동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군인이 되고자 하는 지역 내 대학의 이대녀를 향군 여성회의 조직에 적극 참가하게 하여, 기존 여성회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경험을 전수하면서 선구자적으로 이끌어 주면, 여성의 사회참여 폭의 확대는 물론 향후 향군의 여성 활동의 질과 양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 되고자 하는 이대녀에게는 그녀들의 젊은 날에 향군과 함께했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생활도 진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역 후에도 향군의 여성회원이 돼 향군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선도적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희망해 본다.

최근 동·남중국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장 광 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2021년 2월,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동·남 중국해를 놓고 벌이는 전략적 경쟁이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의 미중 갈등은 우리의 안보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달아오르는 미중 경쟁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잉태되기 시작한 미중 간의 경쟁의식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재되어 왔으며 적어도 2017년까지는 가시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촉발된 본격적인 경쟁상황은 이제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및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동·남 중국해에서는 양국의 군사력에 의한 치열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제가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2014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하고 있는 ‘휴즈’ 암초를 대상으로 매립작업을 실시하고 활주로와 항구를 구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6개의 암초를 추가하여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서 연유한다.

이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선포하고 “일본, 호주,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무단 점유를 무력화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의지는 2019년,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가시화되었다.

2021년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의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만을 중심으로 이러한 양국의 군사적 행보가 점증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기들에

의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이 잦아지고, 2021년 1월에는 미 항공모함 시오도어 루즈벨트가 대만 인근 해역을 통과하자 중국이 이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을 해석함에 있어 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세력전이적 상황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기존의 단극체제 하 패권국인 미국에 대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세계적 패권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사실이라면, 두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대립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이익과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G7이 확대된 D10에 한국·호주·인도를 포함시켜 중국에 대응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고, 미국·인도·호주·일본 등이 포함된 소위 '쿼드(Quad)'에 한국 등 주변국을 포함시키려 한 시도도 있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며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함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시기가 멀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에게 동맹 재조정을 유도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거나 약화를 도모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 및 군사적 압박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2016년,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했을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과 더불어 서해에서 대규모의 함대를 발진시켜 실탄사격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남중국해는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산을 위주로 하여 수입하는 에너지 원료의 약 90%가량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서아시아와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중 양국의 제한적인 군사훈련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 갈등이 고조될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략적 대비 방향

첫 번째,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깊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전쟁을 통해 양국은 혈맹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관계의 산물인 한미연합방위태세는 현재에도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는 한국에 있어 사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와 더불어 기타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확실한 수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량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한국의 경제상황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해를 가운데로 한 양국 간의 대립적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위 이익을 내어주는 이익교환전략, 그리고 균형전략, 편승전략 등의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안보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국익을 위한 해양 전략을 구상하고 필요한 전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남중국해역은 한국에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와 인접한 이어도 지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그것과도 중첩되어 있어 미중 갈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 지리적 상황은 우리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어도 해역에서의 단기적 군사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동·남 중국해에 대해서는 유사시 출동하여 우리 선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사이의 한국 안보

홍 성 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 융합학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패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있는 한 중국의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보다 앞선 2월 4일 그는 중국을 미국의 번영과 안보, 민주주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면서,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과 공격적, 강압적 행태를 억제하며, 인권, 지적재산권 침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들을 대거 폐기하면서 중국정책 만큼은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더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지도부가 당파를 떠나 중국의 패권주의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중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경쟁과 갈등국면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중국은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 이후 30년 이상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고, 현재 GDP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힘입은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육로와 해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제19대 대회에서 이를 당장(黨章)에 명기하여 국가적 과제로 채택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재원조달을 위해 2015년 12월, 57개국이 참여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주도하여 설립했다. 2019년 4월 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 고위층대회는 38개국 정부수반과 유엔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40여명의 국제기구 대표들을 포함 총150개국, 92개 국제기구에서 6,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건설하자는 것은 경제 합작에 관한 제안이지 정치연맹이나 군사동맹 또는 중국클럽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여러 나라가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환영한다.”고 역설했다.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세계 60여 개국, 전체 인구의 2/3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이 같은 부상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패권주의로 간주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가 주장한 인도태평양전략의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QUAD)를 결성하고 국제기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쿼드의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QUAD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참여하는 QUAD Plus로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2021년 미 국방예산요구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을 포함한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해 2022년도에는 46.8억 달러를, 또 2023-2027의 중기계획에는 226.9억 달러를 요구했다.

격랑의 미중관계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인권문제와 신장, 위구르, 대만, 홍콩 등에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행태들과 도발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에 대응해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정치국원은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권력을 남용하여 외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아쳐, 미중관계는 바이든 정부 시작부터 매우 경색된 국면에 처해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남중국해에서 특히 심각한데, 80%에 달하는 수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국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스프라틀리 군도가 바위섬이라 중국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명 해상민병대 200여척을 상주시키며 필리핀 선박들을 힘으로 내몰고 있어 역내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도서들의 중첩된 200마일 EEZ 경계

획정에 있어서도 중국의 우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역내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역내 균형자로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 실시해왔고, 특히 2020년 3월에는 이 지역 최초로 해전을 가정한 SM-2 대공미사일 실사격훈련도 실시했다. 하지만 중국도 항모 랴오닝함을 포함한 함대를 출동시켜 4월 한 달 동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무역 및 산업 분야에서 미중관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양국은 수차례의 보복 관세로 공방을 거듭하면서 5G시장에 대한 기술 패권 경쟁을 첨예하게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국방수권법과 2019년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으로 정부와 기업들의 화웨이 기술사용을 금지시켰다. 4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대책 회의에 삼성을 포함한 19개 글로벌기업 리더들을 화상으로 불러 반도체, 배터리, 광대역통신 인프라의 세계주도권이 미국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도 지난해 3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5G 기지국,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AI, 특고압 송전망, 신에너지자동차, 고속철도 등 7개 분야 新인프라 건설에 약 5,8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와 기술플랫폼 개발에 주력하며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불가피하다. 세계 무대에서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패권경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날 트럼프정부 요인을 포함한 미국인 28명의 중국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 퇴임하는 트럼프의 등에 화살을 날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중국인 24명의 명단을 발표하여 중국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중 갈등 속의 한국안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를 모토로 ‘미국이 돌아왔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외정책은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70여년 만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 모델국가로 발돋움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함께 도입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해방기부터의 무상원조를 비롯하여 1970년대 초까지의 무상 군원, 그 후 한국의 산업화를 지원해온 무역 최혜국 대우 등을 포함한 여러 시책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국가안보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미국과 지난 70여 년 간 혈맹으로 다져온 한미동맹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인류의 공동번영과 평화증진을 위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국가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